

잡월드, 철도, 공무원 ...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라



조순자 기자

세계 도처에서 극우의 위협
브라질 대선 극우 당선
미국 유대인 11명 살해

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사회주의,
미국 정치 논쟁의
장에 입성

3면

사법 농단과
임종헌 구속

6면

제1차세계대전을 끝낸
독일 혁명 100주년

4~5면

난민과 이슬람을 다룬
책/영화/다큐 추천

7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승소와
한일 관계

3면

노동자 투쟁

잡월드 노동자 파업 2면
11월 9일 공무원노조
하루 행동 7면

임금 삭감, 정규직화 외면에 분
노하는 철도 노동자들 2면

집단 해고에 직면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정부는 당장 한국잡월드 직접 고용 책임져라

강철구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은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해 온 한국잡월드 노동자 150명은 집단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자회사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용역 회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12월 말에 집단 해고될 수 있다.

한국잡월드의 자회사인 '한국잡월드 파트너즈'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는 자회사 전환 채용 접수에 응하지 않으면 “향후 별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는데, 황당하게도 사측이 오히려 해고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내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수익성 내기를 목표 삼으면 안전 투자에 소홀해지고 노동조건 개선도 어려워진다.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은 사측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10월 3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은 말했다. “조합원들의 투지가 높습니다. 조합원들 회의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전원 자회사 전환 채용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용 부분회장은 “한국잡월드 강



자회사의 해고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사들은 비상대피 안내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가진 비정규직 강사 사원증으로는 실제 재난이 발생해도 비상대피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직고용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을 바꾸는 투쟁

한국잡월드가 지난해 12월에 작성한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위탁사업계약 만료에 따른 직접고용 추진 검토 및 시행”이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0일 노사전문가협의체 4차 회의에 고용노동부 파견

컨설팅단이 참여하면서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로 선회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산하 기관의 자회사를 추진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관료들의 낙한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단지 그 뿐만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가 의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잡월드에서 자회사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 다른 곳에서도 자회사 추진이 도전받을까 봐 우려한다.

따라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한국잡월드 자회사 추진을 잠시 중단하고 재논의하라고 권고한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전환 방식으로 자회사 방안을 제시했었다.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은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면서 투지를 보여 주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까지 하는데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분노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잡월드는 정규직 전환 담당 부서인

노동부의 산하 기관으로 상징성이 큰데도, 정부가 팔짱 끼고 방관하는 것에 노동자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다.

10월 24일 열린 공공운수노조 비상대표자회의에서 박영희 분회장은 “20만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노총을 믿고 가입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진다”며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잡월드 파업의 승리를 위해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이 투쟁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정규직 임금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면

신임 사장 하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철도 노동자 조건

이정원

지난 2월 취임한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동반자적 노사 관계 구축, SR(민영화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과의 통합,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철도의 현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기대를 모았던 철도공사-SR 통합 문제는 후퇴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젓이 SR 운영 노선의 확대를 추진하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인사를 철도공사 책임자로 선정했다. 최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SR 사장과 야당 의원들은 SR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철도 노동자들의 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공공기관 중 산재 최대 발생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는 “2006년 이후 단 1명이 충원”된 기가막힌 현실을 규탄했다.

사측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도 부족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임금 보전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올해도 임금 삭감을 압박하고 있다.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거나(다음해로 연차 이월), 수당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철도공사 KTX 승무원 직접 고용 합의 발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문제에서도 철도공사 측의 태도는 뻔뻔하다. 사측은 비정규직 9200여 명 중 고작 2300여 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자회사로 전환하거나 아예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지어 최근 사측은 KTX 열차승무원 553명에 대한 직접고용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겠다고 발뻘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10월 24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팻말 시위를 벌였다.

철도공사는 지난 6월 27일 “열차

승무, 역무, 입환 등 업무”에 대해 노·사·전 협의회의 전문가가 조정 결정을 따르기로 약속했다. 석달 후 발표된 전문가가 조정 내용은 KTX 열차승무원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담았다.이 업무를 생명·안전 업무로 규정된 것이다.

사실, 당시 전문가가 조정 내용은 그외의 다른 업무들(역무, 콜센터, 차량 입환 등)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다.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수를 꽂은 것이다.

그런데 철도공사 사측은 이제 전문가가 조정 내용조차 이행할 수 없다며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KTX 승무원 직접고용은 관련법이 개정된 뒤에나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법률 제개정 없이 직접고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사 측이 정규직화를 회피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 외에도 정규직 전환 불이행 문제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측은 직접고용(정규직 6급) 전환이 확정된 노

동자들 중에서도 용역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5년 이하인 노동자들은 6년 뒤에나 전환하겠다고 한다. 오영식 사장 임기 중에는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정규직(6급)보다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으로 묶어 두겠다는 얘기이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지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서도 인색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철도공사는 원청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임금 교섭에서 자회사 사측이 3~4퍼센트 이상의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도 철도공사원청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동반자적 노사관계?

이 같은 상황은 오영식 사장이 말하는 ‘동반자적 노사 관계’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잘 보여 준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조건을 악화시키면서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것도 지독한 모순이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서비

스 제공 노동자들에게 괜찮은 조건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임금 삭감을 저지하고 정규직화·처우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데 철도노조 집행부가 파업 일정을 잡아 놓고도 경영진이 내년 인건비 부족 자구책을 제시하면 올해 수당 삭감(연차 이월)을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불가피하지도 않은 후퇴 안을 내놓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적잖은 조합원들이 ‘지도부가 투쟁할 의지가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지도부가 사측의 정규직화 회피나 말 바꾸기에 단호하게 맞서지 않는 것도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은 사측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금 역제를 위한 직무급제와 노동 조건 악화를 가져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므로, 노동 조건 악화를 저지하는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사회주의, 미국 정치 논쟁의 장에 입성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최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사회주의의 기회비용”이라는 제목의 72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첫 문장이다. “카를 마르크스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가 미국 정치 담론에 돌아오고 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세세한 정책 제안은 의회와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백악관의 시각에서 볼 때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사람”의 주요 인물은 물론 버니 샌더스다.

샌더스는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특별한 위협이었다. 불만에 차서 공화당 지지로 기울고 있던 블루칼라 유권자들 다수에게 샌더스가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샌더스의 정책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은 단일 의료보험 체계 구축이었다. 이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닮은 체계다.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같은 민주당 내 주류 인사들은 이 정책을 악의적으로 무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민간 보험회사들이 득세하는 미국 의료 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뜻했다.

샌더스는 특별히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자이다. 그래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영국 노동당과 비슷한 성향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오랫동안 득세했던 북유럽 사회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린다.

그러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소련,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 쿠바 등 스탈린주의 국가도 표적으로 삼는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특별한 위협이었던 버니 샌더스

여기에는 두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스탈린 치하 소련의 강제 공동농장화나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같은 커다란 참극을 연상시켜서 샌더스 같은 인물에 동침하는 것이다.

둘째, 자유시장 옹호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한 사회주의 비판을 반복하는 것이다. 즉, 계획경제는 시장보다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스탈린주의 정권들이 혁명이 카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철저한 곡해라는 분석을 무시한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자력 해방으로 봤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연합한 생산자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의해 민주적이고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자주관리 경제가 될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 계획은 스탈린 치하에서 구축된 중앙집권적 지령 체계 같은 것을 기초로 하지 않을 것이다.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민주적 조율과 협상을 기초로 할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

게다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쓴 총알의 상당수는 과녁을 한참 벗어나기도 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는 현재의 중국을 다루

지 않는다. 현재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세계시장에 긴밀히 연결된 매우 역동적인 국가자본주의 경제를 통솔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 상상하는 순수한 시장경제가 전혀 아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북유럽 나라들보다 약 20퍼센트 높다는 등의 사실을 잔뜩 모아놓았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 기대어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신용을 잃었다.

유엔개발계획은 인간개발지수(HDI)를 개발해 왔다. 인간개발지수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는 국내총생산뿐 아니라 기대 수명과 교육 수준도 고려한다. 2018년 인간개발지수는 노르웨이가 1위, 스웨덴이 7위, 덴마크가 11위를 차지해, 13위인 미국을 모두 앞섰다.

이 격차는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발전한 복지국가들이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런 집단적 서비스는 개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게다가 자유주의적인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렇게 말한다. “실질 국내총생산의 차이는 대체로 비용이 아니라 선택을 보여 준다.

“북유럽 노동자들은 ‘휴가가 없는’ 우리 나라[미국] 노동자들보다 휴가도, 가족과 지내는 시간도, 여가 시간도 훨씬 많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도 인정하듯이, 북유럽 사회는 자본주의와의 타협을 상징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그 타협은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압박 하에서 모든 곳에서 붕괴돼 왔다.

자본주의에 맞서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28호 / 번역 차승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김승주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원고 1인당 1억 원씩 지급.)

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양승태의 사법농단 때문에 이제야 나왔다. 그러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한 분도 94세의 고령이다.

이 분들의 고통이 1억 원으로 치유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이 지난 고통의 세월을 보상해 주기에는 턱없이 미약하다.

그마저도 실제 배상까지는 험난할 듯하다.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일철주금이 판결에 끝까지 불복하면 한국 내 자산을 가압류하는 등 배상을 강제해야 한다.



일본에 끌려간 강제징용 노동자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재판 결과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서 항의(초치)하고 강경화 외교통상부에 직접 전화하기도 했다.

강제징용 소송이 이번 재판 하나로 끝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의 소송도 줄줄이 있다.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는 15만 명으로 집계되고 유족은 2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안부’ 문제도 걸려 있다.

무엇보다 일본 입장에서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문제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걸린 판돈이 크다.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군사대국화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판돈

우파 언론들은 일본의 반응에 장단을 맞추며, 한일 관계에 암운이 드리우게 됐으며 피해자들의 한 줄기 희망에 재를 뿌렸다. 한·미·일 간 동맹 강화(의존)라는 전통적인 친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국 지배자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은 박정희 정권이 피해자 개인들의 동의도 없이

그들의 고통을 헐값의 경제 개발 자금과 맞바꾼 것이다. 협정에는 “배상”이라는 표현도 없다. 그래서 2012년 대법원조차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게 아니라고 봤다.

심지어 2010년에는 일본 외무성이 한일협정과 개인 청구권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내부 문서도 공개됐다.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청구권이란 국가의 청구권인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모호하다. 외교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다는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

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는 견해를 고수했다(2005년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문재인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자격으로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당시 국무총리 자격으로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할지, 앞으로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편에 설지 의심스러운 이유다.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는 단지 과거사가 아니다. 현재 제국주의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피해자를 위로하고 실천은 뜻뜻하지근하기 이를 데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반대 투쟁의 연장선 위에서 이 문제는 진정한 해결에 다 가설 수 있다. 특히 제국주의의 원동력인 자본주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노동계급 고유의 힘이 결합될 때 효과적일 것이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독일 해군 병사들이 일으킨 반란은 독일 전역으로 번져 제1차세계대전을 끝내고 혁명으로 이어졌다

1918년 11월 독일 혁명을 기억하며

독일 혁명은 한 해 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과 대조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 독일 혁명은 곰곰이 되짚을 것이 많은 20세기의 전환점이었다.

잊혀진 혁명에서 계급의 기억으로

김민식

독일 혁명은 1918년 11월에 시작돼 1923년 10월 패배할 때까지 5년 동안 지속됐다. 봉기, 대중파업, 병사 반란 등 광공연한 계급 전쟁이 나라를 뒤흔들었다. 곳곳에서 무장한 노동자들이 반혁명적인 준군사 조직들과 충돌했다.

혁명은 1918년 11월 2일에 시작됐다. 독일 북부 뢰 왕에 주둔해 있던 해군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병사들의 반란은 참혹한 제1차세계대전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다.

제1차세계대전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끔찍한 전쟁이었다. 독일의 정치인들과 군 지휘관들은 9개월이란 끝날 수 있다고 보며 1914년 8월에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은 4년을 끌었다.

독일 자본가들이 경쟁국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적 전쟁을 치른 4년 동안, 노동자들은 참호에서 피를 흘리고 고향에서 굶주림에 시달렸다. 전쟁 동안 노동자 170만 명이 죽었고 1916~1917년 "순수의 겨울"(순무를 주식으로 먹어야 할 만큼 식량난 심각난 시기)에 75만 명이 야사했다.

전황도 독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있었다. 전쟁 마지막 해인 1918년에만 독일군 병사 4000명 가량이 연합군 진영으로 탈영했다. 전체 탈영병 수는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도 독일 최고사령부는 함대에 출전을 명령했다. 1918년 10월 말 빌헬름 2세하해 군함의 해군 병사들이 함대의 보일러를 고장 났다. 함항을 거부한 회

니히호의 한 병사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이것들이 우리의 마지막 항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적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쌍일 대로 쌍일 대중의 비뚤함이 지배자들을 상대로 폭발했다. 길 해군 병사 반란은 순식간에 봉기로 발전해 독일 북부 도시들로 확산됐다. 혁명은 불과 며칠 만에 베를린에 당도했다. 11월 9일 황제(카이사)가 퇴위했다.

이제 프로이센 왕정이 붕괴하고 군주제가 폐지됐다. 권위를 가진 의회도 없었다. 독일 국가 기구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노동자·병사·해군 평의회가 당시 유일하게 권력 비슷한 기관이었다.(그러나 새로운 토대 위에서 나라 전체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조율되는 체계적 조직이 되지는 못했다. 일종의 노동자 권력의 모자이크라고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들이 독일을 통치했다.

개혁이나 혁명이나

독일 혁명은 제1차세계대전을 끝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으로 차르 체제가 무너지면서 제1차세계대전의 동부 전선에서 전투가 중단됐다. 곧이어 1년 뒤 독일 혁명으로 서부 전선의 전투마저 중단되면서 전쟁은 마침내 종로됐다. 독일 혁명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반전 평화 운동이었다.

그리고 독일 혁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전 자체의 문장을 깨게 만들었다. 독일은 당시 유럽 대륙에서 가장 발달

자본주의 나라였다.(1917년 러시아는 여전히 대체로 농업 국가였다.) 역사야 오랜 노동운동과 운동과 사회주의 조직이 있었다. 그런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나서면서 독일 자본주의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 겠지.

5월에 열린 독일의 혁명적 투쟁들은 대중적 개혁주의의 전통이 있는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함을 보여 줬다.(1918~1923년 독일은 1917년 러시아보다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이나 한국과 더 닮아 있었다.)

1918년 11월 이전에는 혁명은 차르 전제적 치하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문맹한 서구”에는 볼 관계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1900년에 시작된 독일 사회민주당 내 논쟁도 이와 관련돼 있었다. 당시 사회민주당에서는 개혁이나 혁명이나, 즉 사회 진보가 자본주의 체제의 진보를 통해 가능하나 아니면 점진적 변화를 통해 가능하나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수정주의’를 대변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수정주의에 대해 혁명적 비판을 했다. 그런데 둘 다 당시에는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은 카를 카우츠키의 중간주의적 입장이었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혁명적 정당이지만 혁명을 일으키는 정당은 아니다.”

그러나 1918년 11월 2일 쾰른 병사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대중의 불만이 폭발하자,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문제가 유럽의 변방 러시아에서 유럽

의 중심지로 옮겨 왔다.

무엇보다, 독일 혁명은 그 전체(1917년)에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러시아의 고풍을 타개하고, 유럽에서 혁명을 확산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독일 혁명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이끌던 영감이 크게 빛났다. 그러자 일단 독일 혁명이 시작되자 볼셰비키 혁명의 운명은 독일 혁명의 성공에

사회민주당은 어떻게 혁명을 가

독일 혁명이 성공했다면 아돌프 히틀러와 이오시프 스탈린의 이름은 역사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두 독재자의 등장은 독일 혁명의 패배가 낳은 끔찍한 결과였다.

러시아 혁명이 이오시프 스탈린의 공포 정치로 이어진 것은 혁명의 발전적 결말이 아니고, 독일 혁명이 패배한 결과였다. 독일 혁명의 패배로 밀마임은 국제혁명의 실패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 고립되고 이오시프 스탈린의 반혁명이 최종 승리했다. 스탈린은 1923년 10월 독일 혁명이 최종 패배하자 그 이듬해에 ‘일국사회주의’를 천명했다. 러시아가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의 ‘일국사회주의’가 국제 혁명이라는 모험으로 골머리를 앓고 싶지 않은 ‘국가관료들의 정서를 명확히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1923년만 해도 비

중 있는 인물로 전혀 아니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의 노동계급은 260만 명이었다. 그나마도 1억 명의 농민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의 운명은 유럽의 선진 경제, 특히 강력한 산업 노동인구와 선진 경제를 보유한 독일의 지원에 달려 있었다. 독일 혁명의 발발에 “수많은 러시아 노동자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까닭이다.

막았는가?

독일 혁명이 패배하자 하틀러의 반동적 그림자가 어렴풋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 뒤 1929년 대공황은 급기야 하틀러의 권력 장악으로 이어졌다. 독일에서 파시즘은 공산주의자들이 적에게 상처를 입힐 만큼 강력했지만 적을 완전히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다면 독일 혁명은 왜 패배했는가?

정치적 ‘왕따’에서 자본주의의 구원자로

독일 혁명에서 핵심 정치 행위 세력은 우익 창성, 사회민주당, 독립사회민주당, 공산당이였다. 혁명이 터지자 독일 지배계급은 재빠르게 사회민주당(SPD)을 자기편으로 감싸 끌어들었다. 사회민주당은 1875년에 창당해 1890년부터 합법 활동을 했다. 사회민주당은 당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당시

▶ 5편으로 이어짐

사회민주당은 어떻게 혁명을 가로막았는가?

독일 혁명이 패배하자 히틀러의 반동적 그림자까지 어렴풋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 뒤 1929년 대공황은 급기야 히틀러의 권력 장악으로 이어졌다. 독일에서 파시즘은 공산주의자들이 적에게 상처를 입힐 만큼 강력했지만 적을 완전히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다면 독일 혁명은 왜 패배했는가?

정치적 '왕따'에서 자본주의의 구원자로

독일 혁명에서 핵심 정책 행위 세력은 우익 정성, 사회민주당, 독파시화민주당, 공산당이였다. 혁명이 터지자 독일 지배계급은 재빠르게 사회민주당(SPD)을 자기편으로 감싸 끌어들이었다. 사회민주당은 1875년에 창당해 1890년부터 합법 활동했다. 사회민주당은 당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당시

▶ 5면으로 이어짐



1919년 베를린의 "스파르타쿠스 봉기"

4면에서 이어짐

세계 최대의 노동계급 조직이었다. 그리고 12개의 일간지, 주간 단계를, 노동현장 조직들과 국회의원 등을 통해 독일 노동자들의 삶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혁명이 된 지 직후 군부에게서 내각 구성권을 넘겨받은 문민 정부(바덴의 막스 공공)는 11월 7일에 사회민주당 지도자 프리드리히 에버트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오래 전부터 한국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들을 지원해 온 프리드리히 에버트 제단은 그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

“나는 이제 황제에게 퇴위를 권고할 생각입니다. 내가 황제를 설득해 낸다면 혁명과의 싸움에서 당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지요?”

그러자 에버트는 이렇게 답했다. “황제가 양위하지 않으면 혁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혁명을 좌악처를 싫어합니다.”

사회민주당은 병사들의 봉기가 불세 비키화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사회민주당은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 그 체제 안에서 진보적 변화를 이루고자 한 개혁주의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들은 마르크스주의자임을 자처했지만, 이미 1914년 독일 정부의 전쟁공채 발행에 찬성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냈다.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은 지배자들의 노동계급 공격을 —배급제, 전쟁 노력 조치들, 노동조건 악화—을 도왔다.

사회민주당의 주류 지도자들은 조국 방위투쟁을 앞세웠다. 곧 반동의 보루인 러시아의 차르가 독일 민중을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려면 독일의 전쟁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917년 2월 혁명으로 러시아 차르 체제가 붕괴했다. 이제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러시아가 아니라 프로이센 국가와 대기업의 전쟁 정책이 더 위협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혁명은 반대했다.

지배계급은 사회민주당이 대규모 혁명 운동을 억제해 주기를 기대했다. 부르주아 정치인 구스타프 스트라스만은 이렇게 말했다. “내 생애가 향후 2~3년 동안 사회민주당이 없는 정부는 정말이지 불가능할 것 같다. 안 그러면 우

리가 총아입 물결에 휘청거릴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 전에 사회민주당은 대체로 지배계급에게 멀리받는 정치적 ‘왕따’였다. 이제 독일 국가는 사회민주당에 최고 공직 자리를 내줬다. 프리드리히 에버트가 새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다.

반동

한편, 길에서 반란을 일으킨 병사들은 사회민주당원인 구스타프 노스케를 소비에트 의장으로 추대했다.

혁명 얼마 전까지 자본가 정당들 지지하고 사회민주당을 극좌파로 여긴 사람들이 생긴 처음 정치 투쟁에 참가했다. 그들은 사회민주당과 다른 사회주의 정당을 구별하지 못했다. 사회민주당이 전에는 왕정을 지지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노동자·병사 평의회끼리도 누가 누구인 잘 몰랐습니다. 하물며 베를린에서 온 노스케가 어떤 사람인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사회민주당 의원이란 거밖에 몰랐습니다.”(반란 병사들의 리더인 카를 아를펠트가 한 말)

그 결과, 노스케가 정부 임명에서는 킬 혁명 진압 책임이었고, 해군 병사들과 노동자를 임당에서는 혁명 촉진 대표자가 되는 구아비리한 상황이 연출됐다.

그러나 노스케는 우익적 준군사 조직 ‘자유군단’(the Freikorps)을 이끈 자다. ‘자유군단’은 대부분 중급 장교 출신 자원자들로 구성됐다. ‘자유군단’은 1919년 내내 좌파와 노동계급을 상대로 대대 활동을 벌였는데, 특히 1919년 1월 스파르타쿠스반 봉기를 진압하면서 결출한 혁명 운동의 리더들인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를 살해했다.

그 뒤 노스케는 “누군가는 맹견이 되어야 한다”며 바이마르공화국의 반동화를 주도했다. 이것은 훗날 나치의 지옥문을 열었다.

11월 혁명은 즉각 정치권력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방어에 힘입어 낡은 국가 기구가 재건됐다. 그리고 14년 뒤 반동적 ‘자유군단’의 후예인 나치 독재대가 사회민주당을 비롯해 반대파들을 모두 숙청했다.

독일공산당이 남긴 비극적 교훈

독립 혁명이 패배한 또 다른 이유는 공산당은 요구되는 도전에 제대로 응

독립적인 혁명적 노동자 조직이 취약

했다. 처음에는 사회민주당에 기대를 걸었

던 노동자들도 혁명을 경험하면서 생

각이 엄청나게 바뀌었고, 그들의 요구

도 급진적으로 변했다.

황제가 타도된 뒤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 물결이 시작됐

다. 파업 일수는 1918년 520만 일에서

1919년 5400만 일로 급증했다. 노동

자들이 물결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혁명 전에 150만 명이었던 노동조합원

수가 1919년 12월 730만 명으로 증가

했다.

그런데 사회민주당이 지배계급과 동

맹하고 있었는데 독립적인 혁명적 노

동자 조직도 취약하자 지배계급의 일

부가 오판했다. 1920년 3월 우익 군 장

성들이 쿠데타(무력정변)를 일으켜 사

회민주당을 제거하고자 했다 — '카프

쿠데타'.

그러나 카를 마르크스가 지적했

이, 때로 반혁명의 채찍이 혁명을 심화

시킬 수 있다. 노동자들은 대규모 총파

업으로 맞섰다. 쿠데타는 실패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노동계

급의 좌경 급진화도 진행됐다. 사회민

주당은 좌파계열 정당들에 지지를 빼

어갔다.

처음에 사회민주당이 분열한 때는

전쟁 동안이었다. 1917년 사회민주당

우파 지도부는 전쟁을 반대한 소수파

를 축출했다. 몇 년간 소수파들은 독립

사회민주당을 만들었다. 독립사회민주

당은 혁명적 정당이 아니었다. 말은 혁

명적으로 하면서 실천은 개혁주의적으

로 하는 중간주의의 정당이었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과 카를 카우

츠크도 독립사회민주당에 합류했다.

카우츠크는 전쟁을 끝내는 것을 지지

했지만, 해군 병사들의 반란 선동에 반

대했다.

잇달은 실수

그럼에도 독립사회민주당은 수십 명

의 당직자와 의원들, 일간 신문, 노동조

합 일원 등 사회민주당 기구의 의미 있

는 부분을 빼어 냈다. 독립사회민주당

은 활발 정당이었고, 덕분에 공개 집회

가 가능했다. 그리하여 전쟁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수렴할 수 있었다. 사회민주당에서 분

리한 지 6개월 만에 당원이 12만 명으

로 늘었다(사회민주당 15만 명).

그러나 독립사회민주당도 급진화하

는 노동계급에게 적절한 혁명적 리더

십을 제공할 수 없었다. 이제 독립사회

민주당이 분열했다. 독립사회민주당

당원 80만 명 중 40만 명이 가장 일관

된 혁명적 정당인 독일공산당에 가입

했다. 독일공산당은 50만 명 규모의 정

당이 됐다.

혁명적 정당이 없어서 실패한 혁명

들과는 다르게, 독일에서는 혁명적 정

당이 있었다. 실제로 1920년 이후 독일

혁명의 역사는 독일공산당의 역사이기

도 했다. 수백만 노동자들이 독일공산

당의 리더십을 기대했다. 그러나 독일

공산당은 요구되는 도전에 제대로 응

전하지 못하고, 연거푸 재앙적인 실수

를 했다.

독일공산당은 군주제가 타도되고 나

서야 창당했다. 독일공산당은 혁명적

상황에서 대중적인 혁명적 정당을 건

설해야 하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에 직

면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마침내 사회민

주당에서 탈당해 공산당을 창당한 때

는 1918년 12월이었다. 룩셈부르크는

100만 명 규모의 정당에서 20만을 보

낸 뒤에 겨우 수천 명의 지지자들을 확

보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지만 대체로

경험이 없었다. 혁명의 한복판에서 창

당하면서 훈련의 시간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가장 유능한 지도자였던 로자

룩셈부르크는 1919년에 살해당했다.

그래서 독일공산당 지도부는 너무도 자

주 주저하고 좌우 동요를 반복했다.

혁명의 높은 국면에서는 소수의 전

투적 노동자들이 다수 노동자들의 지

지를 얻지 않은 채 즉각 권력을 장악하

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 1919년 1월 베

를린의 "스파르타쿠스 봉기"는 자유군

단에 의해 분쇄됐고, 사회민주당은 이

를 방조했다.

1921년 3월에 독일공산당은 독일 중

부에서 벌어진 광원들의 격렬한 방어

적 파업을 국가 권력을 상대로 한 혁

명적 공세와 봉기로 전환하고자 했다

(3월 행동).

혁명가들이 적극적인 소수의 무장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봉기를 재

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었

다(공세 이론). 그 결과 파업 노동자들

출근 노동자의 물리적 충돌이 전국 각

곳에서 벌어졌다.

독일공산당 내 좌파파 경향이 이 행

동을 주도했다. 좌파파는 이전에 패배

와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운동

에 막 입문해 행동하지 못해 단말이 난

사람들로서, 노동조합 속 활동이나 선

거 출몰을 시간 낭비라며 기각하는 경

향이 있었다. 반경 전에 독립사회민주

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은 사회민주당 · 독

립사회민주당과 공동 투쟁하는 것을

반대했다.

국제적으로도 1920년 9월에 이탈리아

의 공장장제 운동이 패배한 것이 영향

을 미쳤다. 이탈리아사회당의 중간

주의 지도부(세라타)가 봉기를 조직하

지 않은 것이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었

다. 이 패배에 대한 반발심이 독일에서

는 좌파파적 모험주의를 부추긴 것이

다. 이렇게 개혁주의와 좌파파주의는

서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공동전선

혁명적 정당의 임무는 노동자들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혁명을 수행하려

는 노동자들을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

나 독일공산당은 노동계급의 행동 없

이 투쟁에 나섰다가 산산조각 났다. 몇

주도 안 돼 당원 수가 20만 명으로 줄

었다.

중요한 문제는 공동전선이었다. 가

혹한 인플레이션과 정부 탄압에 맞서

노동자 조건을 방어하기 위한 공동전

을 구축함으로써만 노동자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 즉, 독일공산당은 여전히 개혁주의 사상에 머물러는 노동자들을 즉각적 이익을 위한 공동 투쟁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산당 정치의 우월성을 입증해야 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런 접근법을 채택하기 시작해 공동전선에 참여했다. 그 결과 공산당은 규모와 영향력 모두 성장했다.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은 공산당의 다결 행동 요건을 무시했지만, 공산당은 사회민주당 기층黨員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그 덕분에 1921~1922년 공산당원 수는 4만 명이 넘었다. 사회민주당은 대략 그 반에 불과한 수가 줄었다.

1923년 새로운 혁명적 위기가 도래하자 독일 자본주의의 중심이 흔들렸다. 프랑스 군대가 루르의 핵심 공업 지대를 다시 점령했다. 경제는 초인플레이션으로 거의 파탄났다.

대중 파업이 분출했다. 혁명의 시작 국면에서는 실종돼 있던 요소가 이제 존재했다. 대항적 공산당이 노동계급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 독일인 인종 중심지에서 공산당이 사회민주당보다 우세했다. 전체 노동조합원의 3분의 1인 250만 명이 지역 수준에서 조직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기회를 놓치다

그러나 공산당 지도부 대다수는 사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1923년 8월을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는 독일의 10월 혁명이 빠르게 오고 있다고 말했다. 혁명자 정세가 너무 유동적이어서 혁명방출의 공격만이 진정한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월 행동의 경험 때문에 소심해진 공산당 지도부는 1919년과는 정반대의 실수를 했다. 개혁주의적 좌파 일부분과 활동하던 당파와 심지어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도 단절하지 못해 대중 반란을 지도할 수 없었다.

독일 노동자들은 공산당의 대안 제시를 기대했지만, 공산당은 무기력했다. “무장 정계는 오랫동안 계속됐지만, 공식 신호는 울리지 않았다.”

공산당 지도부는 10월 21일 총파업과 독일 혁명을 포기했다. 혁명이 거의 총한 방 소이 못하고 패배했다. 혁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패배가 결정적 순간에 행동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독일 혁명의 패배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작고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 크리스 에너시는 독일 혁명에 관해 쓴 책의 제목대로 잃어버린 혁명(the lost revolution), 즉 기회를 놓친 혁명이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혁명적 변화를 원했지만, 이 에너지를 동력으로 만들고 조율할 혁명적 정당이 너무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독일 혁명의 비극이다. 역사는 기관차다. 그러나 그 기관차는 혁명가들이 올라타기 전에 지나가 버린다.

임종현 구속 이후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김문성

이춘식 할아버지는 13년 만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받아 내고 소감을 말했다. “혼자만 남아 슬프고 서럽다.”

양승태 대법원이 대미·대일 관계를 고려해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동안 피해자 동료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체제 아래서 벌어진 사법 농단의 본질이 (삼권분립 훼손 같은 권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사법권을 이용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임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이 사실상 고의적 행위이자 범죄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로 구성이 일부 바뀐 새 대법원 아래에서도 구 여권과 연계된 사법 농단 수사가 그동안 심각하게 방해 받았다. 법원의 위상과 권력을 (외풍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동류 의식(계급 의식이 더 정확한 말일 것이다)에서였을 것이다. 법원은 대놓고 재판 개입 증거를 인멸한 유해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양승태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

그러다가 결국 강제징용 판결 사흘 전인 10월 27일야 임종현이 구속됐다. 임종현은 법원 내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낸 자로, 사법 농단의 실무 지휘자로 지목받아 왔다.

그동안 ‘합법적’으로 자기 방어를 해오던 법원도 임종현 구속영장 기각까지 하는 건 무리라고 본 듯하다. 여론 악화 때문에 특별재판부라도 도입되면, 사법권을 독점해 온 법원 권력이

손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설치될 특별재판부가 양승태 일당을 무죄 판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임종현 구속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심이 크다. 이른바 사법권 독립과 권력의 추악한 실체를 지난 몇 달 간 폭폭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비공개로 조사한 판사들이 80명 남짓이라는데, 이들 다수가 임종현을 책임자로 지목했다고 한다. 이는 고위 판사들의 카르텔이 흔들리는 것을 보여 주는 일이지만, 또한 임종현 선에서 수사 확대를 막자는 공감대가 판사들 사이에 형성된 탓일 것이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양승태는 물론이고, 임종현의 직속 상관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지낸 박병대·차한성·고영한 등과 각각의 거래 재판에 임했던 판사들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종현은 구속 나흘째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검찰이 임종현 구속 기한인 20일 안에 그 윗선인 양승태 등의 죄를 입증해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임종현이 구속됐어도 법원에게는 무죄나 집행유예를 판결할 기회가 남아 있다.

꼬리 자르기?

그러나 꼼수일지라도 법원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인사를 구속한 것은 대중의 적폐 청산 염원이 아직은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뜻일 게다.

애초에 노동자·서민의 거대한 운동으로 전임 우파 정권이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추악한 사법 적폐의 비밀들이 폭로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요컨대,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11월 투쟁이 사법 적폐 청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임종현은 사돈의 회사인 세종호텔 노조 탄압 판결에도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다.

아직까지 강력한 반우파 정서 때문에 우파에게 돌파구가 확 열리지는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0월 30일 스스로 공개한 보고서도 자신들이 정권을 잃은 요인으로 강경 대북·안보 노선을 지적했다. 즉, 너무 우파적이라서 지지를 잃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우파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부진을 이용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재인인의 우선회로 실망감이 커지면서 정치적 틈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운동 지도자들은 문재인에게 지지와 협력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그의 우선회에 맞선 투쟁으로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그래야 세력균형을 더 왼쪽으로 이동시켜 적폐 청산에도 유리하다.

사법 농단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사법 농단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당한 재판 거래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국가 권력의 피해자들이었다. 쌍용차 노동자처럼 정부와 사용자의 대량 해고에 저항한 노동자들이나, 유신 독재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세월호 유가족, 전교조, 진보당 등.

사법 적폐 청산이 노동자·서민층의 정의이고 염원인 이유다.

이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출발점은 재판의 원상 회복일 것이다. 그러려면 재심이나

지연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억울한 구속자들이 석방돼야 한다. 또한 재판이 아닌 불이익과 사찰 관련 문제는 신속히 국가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사법 농단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서 강력하게 단죄하는 것이다. 물론 철저한 사법부 개혁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 단죄로써 지배계급이 함부로 저항 세력을 탄압할 수 없게는 할 수 있다. 피해자 구제는 그 하나다.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내놓았다. 그 안에 따르면, 대한변협과 이 재판을 맡을 법원(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이 자기를 안에서 판사들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중 3명을 골라 임명하자는 것이다.

법원 밖이 아니라 안에서 새로운 합의부를 신설하는 형식이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파의 위헌 시비의 핵심은 유죄 판결을 목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으로 보이게 하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도 재판부 기피나 제척이 가능하므로, 양승태 ‘장학생’들에게 재판을 맡기지 말자는 법이 꼭 위헌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문제는 사법 농단 고위 판사들에게 유죄를 판결할 수 있느냐다. 대중 다수가 기존 법원을 못 믿겠으니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확

실하게 단죄를 하고 싶어서다.

재판 거래 건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판사만 최소 80명이라는데, 법원의 재판부 무작위 배당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 스스로 압수수색·구속 영장 기각으로 판결 의증을 미리 선보이지 않았던가.

특별재판부 설치 제안은 사법 농단의 계급적 본질을 꿰뚫어 본 노동자·서민층의 불신을 반영한 것이다. 우파가 박주민 안이 특별재판부의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한 것에 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파는 만에 하나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확실하게 유죄와 실행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유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음 속셈으로 지금 위헌 시비를 거는 듯하다.

법원 권력의 일부인 현직 판사들 중에서 선발되는 특별재판부의 판사들은 계급적 압력 속에서 판결하게 될 것

이다. 결국 재판부 구성 방식보다는 어느 사회세력의 압력이 더 크지가 수사와 판결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법원 개혁?

지난 반년 간 고위 법관들은 대부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사법 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과 당시에 정권을 쥔 우파, 기업인들의 이해관계가 계급적으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이 일부 바뀐 현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도 사법 적폐 청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앞에서 설명).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정권의 의지 부족도 한 요인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여기에도 계급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 자신이 6월에 내린 친기업적 판결도 우파 대법원이 법 개악을 기다리며 7년간 판결을 미룬 적폐를 계승한 것이었다. 그 판결은 휴일 초과 근무에 초과수당을 할증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판



노동자들이 법과 법원을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이 가능하도록 민주당은 2월에 법을 개악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진보당 수감자들을 석방·사면하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은 10월 30일,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변회재의 이정희 전 진보당 대표 종북 낙인 찍기를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의 무노조 공작 수사를 방해하는 판결을 내려 왔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사법 적폐 청산 같은 사법부 개혁이 충분히 실행될 수 없다.

진정한 사회 혁명이라면 애초에 기존 국가를 대체할 새 국가의 일부로서 완전히 새로운 재판부를 민주적으로 구성해 구 체제의 부패 범죄·비리들을 처리할 것이다. 대중의 개혁 염원을 실현하려면 운동은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공무원 수당 삭감, 유연 노동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016년 기준 중앙정부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보다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한다.

문재인 정부는 장시간 근무가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며, ‘근무혁신’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올 1월에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은 결코 장시간 노동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장시간 노동 해소?

첫째, 공무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려면 인력 충원이 돼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진척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일반정부(공무원+사회보장장기금+공공비영리기관) 고용 비중이 약 7.6퍼센트로 OECD 평균인 18.1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GDP 대비 일반정부 인



문재인은 공무원 인력 충원 없이 노동 강도만 높이려 한다

건비 지출 규모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즉, 공무원 숫자는 적고 고용의 질도 낮다.

소방공무원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579명이고, 근로감독관은 1인당 감독 사업장 수가 1043개나 된다. 집배원은 한 해 20명 안팎이 사고,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고 있어 인력 대폭 충원이 시급하다. 지자체 공무원은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 대처하다가 사고와 과로로 사망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인구 1000명당 0.4명(OECD 평균은 12명)이다.

둘째, 인력 충원을 외면한 채 정부가 장시간 근무관행 해소 방안이라고 내놓은 ‘근무혁신’은 실제로는 유연 근무와 수당 삭감, 노동강도 강화 추진이다.

정부는 바깥 때는 초과근무를 하고 상대적으로 덜 바깥 때는 그 시간만큼 단축 근무(또는 연가)하는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했다. 초과수당을 주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하라는 것이다.

8월에 발표한 지자체 근무혁신 대책에서는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총량을 부여하고, 이 배분한도 내에서 초과

근무를 승인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총량 이상의 초과근무는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총량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대책이 없다.

부서장 평가에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사용 실적과 부서장 자신의 연가사용 실적을 반영해 성과 평가와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적용한 ‘업무혁신’을 지자체로 확대하려 한다.

임금 억제

또, 문재인 정부는 해마다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는 옳지 않다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성과급제는 폐지하겠다고면서도, 현재도를 유지하며 등급 간 차등 지급률만 조금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지난해보다 더 낮은 1.8퍼센트로 책정했다. “공무원 신규 증원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실업률도 높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출신수범하자는 차원”이라며 말이다. 물가상승률에 비춰 보면

사실상 임금 동결이다.

지난해에도 문재인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임금 양보를 강요했다. 심지어 중앙부처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도 줄였다.

신규 채용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정규직 전환은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증명됐다. 공무원 신규 채용도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다.

기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로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애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와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부자와 기업주에게 세금을 거둬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기업주에 맞서 투쟁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맞서 해고자 원직복직뿐 아니라 수당 삭감 반대,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야 한다. 11월 9일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은 그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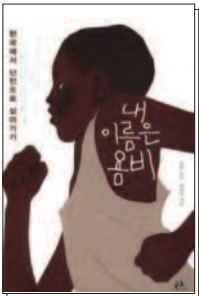
난민·이슬람 다룬 책/영화/다큐 추천



바리데기

황석영 지음, 창비, 2007

탈북민 주인공 ‘바리’가 중국을 거쳐 영국에 정착하기까지 겪는 험난한 여정과 고된 삶을 그린 소설. 억압과 불평등, 전쟁 등 이주민들이 마주하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을 담아낸다.



내 이름은 옴바: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옴비 토나·박진숙 지음, 이후, 2013

한국의 첫 난민 인정자 옴비 토나 씨의 실제 이야기. 출신지인 콩고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됐는지, 힘겨웠던 난민 심사 과정과 한국에서의 삶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다.



술탄 살라딘

타리크 알리 지음, 미래M&B,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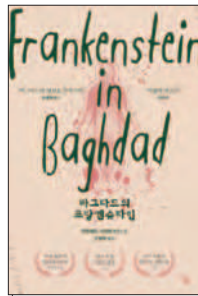
석류나무 그늘 아래

타리크 알리 지음, 미래M&B, 2007

저명한 저술가이자 좌파 활동가인 타리크 알리의 ‘이슬람 5부작’의 일부다. 타리크 알리는 걸프 전쟁이 터졌던 1990년에 “BBC 방송에 나온 어떤 명청한 논평자가 아랍인에게는 문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분노”해 ‘이슬람 5부작’을 쓰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술탄 살라딘》은 살라딘의 영웅담이라기보다는 살라딘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 소설이다. 11~12세기의 역동적인 이슬람 세계를 묘사하며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이슬람의 모습을 전한다.

15세기 말 이베리아 반도(현재의 스페인과 포르투갈)를 배경으로 한 《석류나무 그늘 아래》는 이슬람 왕국 시절이 반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가톨릭 왕조 시절보다 지적으로 더 선진적이고 관용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바그다드의 프랑켄슈타인

아흐메드 사다위 지음, 더봄, 2018

이라크인 작가이자 언론인 아흐메드 사다위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이후 이라크에 남아 폭력과 죽음을 직접 목격했다. 작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점령 하의 바그다드의 모습을 판타지로 재현한다. 수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쟁의 참상이 담겨 있다.



태양은 노랑게 타고른다

차마만다 은고지 아다치에 지음, 민음사, 2010

1960년대 비아프라 전쟁(나이지리아 내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전쟁을 거치며 변화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그린다. 나이지리아 종족 갈등의 배경에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압력과 개입이 있음을 보여 주고, 전쟁에서 계급이 미치는 영향을 탁월하게 묘사한다. 한국에도 비아프라 난민 2000여 명이 난민 지위 신청을 한 바 있다.



킹덤 오브 헤븐

Kingdom of Heaven, 2005

십자군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1187년 하틴 전투와 예루살렘 공방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많은 할리우드 영화와는 달리 십자군과 무슬림을 공정하게 다뤘다. 주인공의 로맨스를 제외하면 많은 부분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고, 중세 시대(특히 무기)를 꼼꼼하게 고증했다. 극장판과 감독판은 50분의 차이가 있는데 감독판을 추천한다. 감독판은 3시간이 넘지만 지루하지 않다.



화염의 바다

Fire at Sea, 2016, 다큐

소형 보트에 몸을 싣고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의 위태로운 여정과 국경에서 이들이 마주하는 ‘오세화된 유럽’의 현실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다큐멘터리. 이탈리아 국경 경비대에 의해 지행되는 구금과 모욕적 대우를 묘사해 국경 통제의 인종차별적 본질을 폭로한다. 그리고 억압적 조건에 맞서 싸우는 난민들의 저항도 훌륭하게 묘사한다.



굿 포스트맨

The Good Postman, 2016, 다큐

터키와 국경을 맞댄 불가리아의 한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려 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체부의 실제 이야기. 이 선거는 유럽에서 난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축소판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난민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가 가능성을 보여 준다.



아이 엠 나스린 I am Nasrine, 2012

억압을 피해 이란에서 영국으로 이주했지만 또 다른 억압을 마주한 두 남매의 이야기. 영국 이주 시스템의 어두운 단면과 그것을 지탱하는 인종차별주의, 그 야만성을 나스린 남매의 인간다움과 대비한다.



더티 프리티 씽 Dirty Pretty Things, 2002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이 런던에서 겪는 고된 밑바닥 생활을 그린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그들을 살인과 폭력, 강간과 같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내몬다는 점을 보여 주는 스릴러물이다.





경고! 세계 도처에서 극우의 위협

브라질에서 극우파 집권, 저항이 필요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10월 28일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승리했다.

보우소나루는 약 55퍼센트를 득표했다. 그의 승리는 브라질 인구 2억 1000만 명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우소나루의 당선은 극우가 세계 곳곳에서 성장하는 현상의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하다. 극우는 모든 곳에서 저항을 받아야 한다.

보우소나루 당선은 브라질 정치가 야만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보우소나루는 1964~1985년 집권한 잔혹한 군부 독재 세력의 간판 인물이다.

10월 27일 노동자당(PT) 후보 페르난두 아다지 지지 집회에 참가한 청년 살루네 레사 알부케기가 총에 맞아 살해됐다. 보우소나루 지지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보우소나루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소수자와 천대받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비열한 말을 쏟아냈다.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경찰의 끔찍한 폭력 사용을 옹호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리우데자네이루 주(州) 한 곳에서만 경찰은 895명을 살해했다.

보우소나루는 스스로 “동성애 혐오자”를 자처하고 “그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보우소나루 당선으로 “지옥문이 열렸다”고 평했다.

노동자당 당원 끌리우자는 <소셜리스트 워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우소나루는 온갖 악행을 대



“그[보우소나루]는 안 돼!” 9월 29일 브라질 전역에서 열린 보우소나루 반대 집회

표합니다.” 끌리우자는 10월 27일 런던 도심에 있는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끌리우자는 이렇게 말했다.] “보우소나루는 그가 보기에 ‘선량한’ 시민은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우소나루가 말하는] ‘불량’ 시민은 파벨라(빈민가) 거주자들입니다.

“보우소나루는 여성은 남성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브라질인] 크리스티나는 이렇게 주

장했다. “10월 28일 이후 브라질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파시스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거운동 초반에, 나치 한 명이 어느 여성의 몸에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칼로 새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시스트

보우소나루가 특별히 독기 어린 연설을 한 10월 20일 후에 여론조사에서 [노동자당 후보 아다지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는 대선이 끝난 뒤

에도 나라를 떠나지 않는 좌파는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연설 때문에 브라질의 명사들이 아다지를 공개 지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지지는 별 효과가 없었다.

보우소나루는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이 칼에 찔렸던 사건을 부각했다. 이 사건으로 보우소나루는 법과 질서를 위한 순교자인 척할 수 있었다.

보우소나루 당선의 의미를 ‘세상만사 다 그렇지’ 하는 식으로 여기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그보다 뿌리 깊은 이유가 있다.

대기업은 보우소나루 당선을 기뻐한다. 보우소나루가 10월 7일 대선 1차 투표에서 승리한 이래로 브라질주가 지수는 18퍼센트 급등했다. 세계주식시장은 하락세인데도 말이다.

보우소나루 당선의 큰 책임은 노동자당에게 있다.

노동자당이 집권한 13년 동안 노동자당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의 계약 수주를 둘러싼 대형 부패 사건에 노동자당 지도부가 연루된 사실이 폭로되면서 당 지지가 추락했다.

이 때문에 보우소나루는 반(反)부패기수 행세를 할 수 있었다. 브라질 사회의 부패한 부분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말이다.

노동자당 부패 스캔들로 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룰라)까지 감옥에 갇히면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의 이미지가 추락했다. 설상가상으로, 룰라의 후임자인 노동자당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는 경제 위기 대가를 평범

한 브라질 사람들에게 떠넘겼다.

아롤도 까르이호는 이렇게 지적했다. “룰라 집권기에는 파벨라(빈민가) 전체가 노동자당 지지 기반이었습다. 그런데 노동자당이 우리(빈민)를 버렸어요.”

보우소나루의 주된 지지 기반은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브라질 남부의 부유한 지역이다. 특히 2015년 이후로 계속되는 원자재 시장 위기로 생활수준이 하락한 신중간계급은 보우소나루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워 줄 투사로 본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일 것이다. 보우소나루는 자신의 경제 고문들을 파울로 구에데즈 같은 [보수적] 경제학자들로 채웠다. 구에데즈는 국영기업 147곳을 민영화하고 소득세율을 일괄 20퍼센트로 정하고 싶어한다.

[브라질인] 리마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군부독재 하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아요.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독재가 뜻하는 바를 알아요. 독재는 고문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우소나루에 맞서는 저항이 있을 것이다. 브라질 군부 독재도 결국은 노동자들의 대중 저항과 파업으로 몰락했다.

브라질에는 강력한 여성·성소수자 운동과 사회운동이 존재한다.

보우소나루와 보우소나루 당선으로 기세가 오른 극우에 맞서는 저항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28호 / 번역 김준호

미국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차별이 중요 범죄를 고무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10월 27일 단일 사건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유대인 공격이 벌어져 열한 명이 살해당했다.

파시스트인 테러범 로버트 바우어스는 체포되기 전에 여섯 명을 더 다치게 했다.

10월 27일 바우어스는 “유대인은 전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고는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에 있는 ‘트리 오브 라이프’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월 28일 미국 전역에서 열린 철야 추모회에 참가했다. 영국 런던의 케이블가(街)에서도 추모회가 열렸다.

이런 공격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유대인 배척적 주장을 포함한

독기 어린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은 것에 뒤이어 벌어진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선거운동 중 트위터에 힐러리 클린턴의 사진을 게시했다. 그 배경에는 쏟아지는 달라 지폐와 ‘다윗의 별’(유대교의 상징)이 합성된 이미지가 있었고, 트럼프는 이렇게 사진 설명을 달았다.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선 후보.”

바우어스의 미친 행동을 보면, 일단 고삐가 풀린 극우 세력은 자체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우어스는 트럼프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 인종차별적인 트럼프조차 충분히 인종차별적이지 않다고 힐난했다.

바우어스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다. “트럼프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세계주의자다. 유대인 기생충을 박멸하지 않는 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말은 빈말이다.”

지난주에는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사제 폭탄이 배달됐다. 폭탄을 받은 사람 중에는 정치 활동가이자 기부자인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도 있었다.

유대인들이 비밀스런 네트워크를 이용해 세계를 주무른다는 유대인 배척적 음모론은 최근에는 소로스를 그 네트워크의 대표 주자로 지목해 왔다.

10월 19일 트럼프는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온두라스] 이민자 행렬에 소로스가 돈을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침략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파시스트들이 널리 쓰는 단어다.

이런 광기 어리고 공포스런 공격들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만 득을 보게 할 위험이 있다.

민주당 자체의 전력이 위낙 안 좋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트럼프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비판하기를 꺼려 왔다.

극우를 꺾을 수 있는 운동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영국에는 [극우의] 잔혹 행위를 좌파 공격에 이용하려는 철면피 같은 자들이 있다.

영국 노동당 내 의견 그룹인 ‘유대인 배척에 맞서는 노동당원들’은 자신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유대인 배척은 “극좌와 극우가 공유하는 것이다.”

‘유대인 배척에 맞서는 노동당원들’의 대변인 유안 필립스는 한술 더 떴다.

필립스는 썼다가 급하게 지운 트위터 게시물에서, 노동당 혼지 지구당과 우드그린 지구당이 [이런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작성한 글을 “악아빠진 말”이라고 했다. 그 지구당들이 당내 의견 그룹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지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의 목소리’는 이스라엘을 비판할 권리를 옹호하는[즉, 이스라엘 비판은 유대인 배척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룹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28호 / 번역 김준호